

李정부 2년차 국감 개막... ‘호남 반도체’ 여야 충돌 예고

與, 국정 성과·책임 여당 부각...野, 부동산 등 검증

조희대 재제정 거부·DMZ 폭발·ETF 등 전선 형성

이재용·최태원 증인 채택 여부 놓고도 ‘갑론을박’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린다. 이번 국감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 등을 다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은 상황이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전남광주 국회의 원 중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은 김원이(목포)·정진욱(동남갑)·권항엽(순천·광양·곡성·구례을)·임문영(광산을) 의원 등 4명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정책·민생 국감으로 규정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주요 국정과제의 성과를 부각하는 동시에 정부 정책의 미비점은 보완해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등이 지방 균형발전과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급 정책 부족이 현재 수도권 전·월세난과 공급 절벽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나아가 확장재정 정책을 둘러싼 비판에도 전임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기초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이재명 정부 실정 검증대’로 삼겠다는 각오다.

국민의힘은 최근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추정 사고,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형사 사법 체계 개편 문제, 전월세 대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 농지 전수조사 등을 ‘10대 핵심 정책 실패’로 삼아 전방위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문제 등도 집중적으로 조명할 계획이다.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맞붙을 전장으로는 국



오늘부터 국감...막바지 준비
국회 국정감사가 6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등 명패가 준비돼 있다. /연합뉴스

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꼽힌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정 정

청 거부가 핵심 쟁점이다. 호남 메가 프로젝트 및 대미 투자 문제는 산업

국립대병원, 의사인력 회복세에도 여전히 ‘부족’

전대병원·화순전대병원 충원율 78.8%·67.7%

창원경상국립대병원 충원율은 111.5% 큰 격차

전진숙 “인력·재정 지원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국립대병원의 의사 인력이 지난해보다 크게 회복됐지만, 여전히 정원보다 2천600여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을)이 5일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6개 국립대병원의 의사 정원은 9천28명, 현원은 7천226명으로 정원 대비 2천602명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병원별 충원율 격차가 다양했다.

전남대병원은 정원 782명에 현원 616명으로 충원율 78.8%를 기록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정원 347명에 현원 235명으로 충원율 67.7%였다.

반면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분원)은 정원 289명에 현원 300명(충원율 111.5%)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충남대학교병원(분원)이 정원 145명에 현원 135명(충원율 93.1%)으로 뒤를 이었다.

국립대병원 전공의는 2024년 1천271명에서 20

25년 503명으로 78명(60.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의사 현원도 6천300명에서 5천503명으로 1천277명 줄었고, 정원 대비 부족 인원은 2천325명에서 4천151명으로 1천826명 증가했다.

그러나 직군별 인력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 현원의 회복이 곧 안정적인 의사인력 확충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규직 의사는 2024년 3천797명에서 2025년 3천704명, 2026년 3천647명으로 2년 새 150명(4.0%) 감소했다. 반면 전공의는 2025년 503명까지 급감했다가 올해 2천602명으로 크게 증가해 2024년보다도 1천379명 많아졌다. 계약직은 같은 기간 887명에서 912명으로 25명 증가했다.

전 의원은 “2024년 의정갈등과 전공의 이탈을 거치며 국립대병원의 의료인력 공백이 크게 확대됐으나, 전공의 복귀와 함께 올해 들어 정원 대비 부족 인원이 상당 부분 줄어든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면서도 “국립대병원 의사는 정원보다 2천602명이 부족하고 정규직 의사인력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 복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전문의를 비롯한 숙련된 의료인력이 지역 국립대병원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이개호 의원, 국감서 전남광주 5대 현안 점검

‘반도체’ 영산강 유역 농업용수 활용 제시

CPTPP 가입 관련 지역 맞춤형 대책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오는 7일 시작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남광주 지역 생존이 걸린 핵심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이 의원은 5일 “전남광주는 전국 최대 농수산물 생산지이자 새로운 첨단산업 거점으로 도약

하는 기로에 서 있다”며 “정부 정책이 지역 산업 기반과 농어민의 삶을 흔들지 않도록 꼼꼼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5대 지역 현안에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첨단산업 유치의 필수 조건인 반도체 용수 확보를 위해 영산강 유역 농업용수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영산·영암호 등 기존 담수호를 활용해 경제적이고 신속한 공급망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정부의 4대 항만공사 통합 추진에 따른 여수 광양항만공사의 위상 악화 우려도 도마 위에 올

린다. 전남 동부권의 유일한 국가 공공기관이 통합 본사의 지역본부로 격하돼 독자적인 예산·투자 결정권을 잃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간 8천500억원 규모의 타격이 예상되는 정부의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과 관련해 최대 생산지인 전남광주 맞춤형 농수산업 보호 대책을 요구한다.

아울러 열악한 지방 재정을 고려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비 분담률을 80%로 확대하고 지역소멸 위기 지역부터 우선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

매년 반복되는 농축수산업 재해와 관련해서도 실제 피해액에 턱없이 못 미치는 현행 복구·보상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정부에 주문할 방침이다. /정성=김문태 기자

스마트공장 도입...50인 미만 71% 유지보수 ‘뚝’

임문영 “AI 없기 전 DX 기반부터 바로잡아야”

직원 수가 적은 제조기업일수록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도입하고도 유지보수와 운영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인 미만 기업은 10곳 중 7곳에서 도입 이후 유지보수가 사실상 끊긴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

속 임문영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을)실이 지난달 19~23일 제조기업 106곳을 대상으로 자동화 설비, 생산관리시스템(MES·POP), 전사적 자원관리(ERP) 등 스마트공장 관련 솔루션의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50인 미만 기업의 71%가 도입 이후 유지보수가 ‘초기에만 있었다’거나 ‘전혀 없다’고 답했다. 100인 이상 기업은 14%로, 기업 규모에 따라 유지보수 단절 비율이 약 5배 차이 났다.

임문영 의원은 “스마트공장은 제조업 AX로 가기 위한 출발점인데, 현장에서 시스템을 운용할 사람도 없고 유지보수마저 끊긴 상태에서 AI만 넣는다고 AX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특히 뿌리기업과 소규모 제조기업이 스마트공장서 DX, AX, 자율제조로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정부 지원도 구축비 중심에서 벗어나 운영인력과 사후관리, 제조데이터 활용과 AI 고도화까지 이어지는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2026

손자녀

가족돌보미 사업

광주여성단체협의회